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8.21)

1.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관련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제일재경(第一财经)은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의 외교부 장관은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3개국의 공동 관심 주제인 국제·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, 회의 기간 3개국은 양자 회담도 가질 것이라고 보도¹⁾
- 중국 외교부 耿爽 대변인은 이번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중국은 한일 양국과 분야별 협력을 내실화하여 3국 간 협력 발전을 추진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공동 수호할 것이며,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준비할 것임을 언급
- 한중 양국은 첨단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win-win이 가능한 협력을 확대하고 G20, APEC, RCEP과 한중일 FTA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, 중일 양국은 정치, 경제통상,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정치 교류를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마련해야 함.
- * 중일 간 민감한 문제에서 중국은 원칙을 강조할 것임을 밝히고 중일 양국은 리스크 예방을 강화하고 갈등과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여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
- 일본기업(중국)연구원 陈言 원장은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의 초점은 한일 무역분쟁 완화를 통한 동아시아의 경제안정과 성장 확보 및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임을 강조
- 중국 상무부 李成刚 장관보조관은 동북아 협력의 확대는 중일, 한중의 제 3국 시장에서의 협력을 추진케 하므로 한중일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함.

1) 「睽违三年中日韩外长会议再举行，日韩贸易摩擦能否迎转机成焦点」, 『第一财经』(2019. 8. 21)

- 환구시보(环球时报)는 한일 양국의 매체를 인용하여 중국의 왕이(王毅) 외
교부장이 대화 협상을 통한 한일 갈등 해결을 희망한다고 보도²⁾
- o 왕이 외교부장은 중일 양국은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소중히 생
각하고 다자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에 반
대하며 다자주의, 자유무역, UN 위주의 국제 시스템 유지를 위해 노력해
야 한다고 언급(일본 NHK)
- o 한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 양국이 밀접한 관계를 구
축해야 하고, 양국이 '일대일로' 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제3국 시장을 공
동으로 개척하고, FTA의 후속 협상을 빠르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
(조선일보)
- o 한편 환구시보는 한국 언론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 여부가
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고, 일본 언론은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의에
대해 일본 국민은 크게 기대하지 않으며, 심지어 한일 관계를 개선할 필
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보도하고 있음을 밝힘.
- JIEMIAN(界面)은 최근 한일 갈등은 한달 전에 비해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
이나,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새로운 충돌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도³⁾
- o 한일 외교장관회의(21일)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對韓 규제가 다소
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으며,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의 불확
실성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한국 언론을 인용 보도
- * 양국은 24일 전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함.
- * 일본 정부는 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 등을 통해 '완화된 태도'는 보이고 있
지만 일본 정부의 목적을 예측하기는 어려움. 21일 한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일
본 정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임.
- o 또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협력을 공감
하였고 오후(21일)에 한일 외교장관은 강제징용 노동 배상 문제와 수출규

2) 「王毅分别会见日韩外长：希望双方通过对话协商妥善处理分歧」, 『环球网』(2019. 8. 21)

3) 「日韩摩擦现缓和, 但福岛核污水去向可能成为一个新冲突点」, 『界面』(2019. 8. 21)

제 강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추진할 것임.

○ 그러나 현재 한일 분쟁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이라는 새로운 충돌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.

*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Hiroyuki Kish 교수는 한일 양국이 무역분쟁에서 서로 양보 가능한 부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한 한국의 태도로 인해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으며,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할 수도 있음을 우려